

다산포럼

‘규제 개혁’이 ‘기업 프렌들리’는 아닌지...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문학평론가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은 죄악이다.”
최근 전국에 생방송된 정부 규제개혁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듣고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임을 알고서는 “그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방송을 듣지 못하고 보도로만 접한 탓인지 설마하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까 반신반의하기까지 했다.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마침 같은 재단 산하여서 덕성여중고 바로 앞에 한 대기업이 진작부터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소송까지 하면서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온 것은 필자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

만 2년 전 대법원에서 패소로 귀결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그 모든 사회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까지 거부하고 나오니까 말이다.

규제를 개혁한다는 자체가 그릇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규제가 생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규제는 대개 독점과 같은 자본의 집중을 막고, 빈부격차를 줄여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기득권과 부의 독점을 뒷받침하는 규제는 철폐 대상인 ‘나쁜’ 규제지만,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지켜야 할 ‘착한’ 규제다.

일찍이 유럽의 혁명기였던 18세기 말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탄탄’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산업의 중심지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거처서 나쁜 규제가 사회에 던진 해악을 분노어린 어조로 노래한다.

“나는 법제화된 텀즈강이 흐르는 곳 근처 / 법제화된 길을 헤매고 다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얼굴마다에서 만난다/ 허약함의 표식, 슬픔의 표식을.”
‘법제화된 텀즈’와 ‘법제화된 길’이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굳어진 직령으로 강이 소수 부유층에 독점되고, 길의 기성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현실에 대한 시인의 통렬한 인식을 전한다. 강이나 길처럼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곳이 칙령의 이름으로 일부의 독점물이 되고 있다면 마땅히 그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블레이크가 이 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굴뚝청소부 같은 아동 노동 착취가 사회적 인 압력으로, 결국 ‘규제’를 받게 되는 과정이 영국 산업화의 다른 한 측면이었다.

규제에 양면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라고해서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가령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것은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국민 일반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다. 학교 주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것도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질서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규제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4대강이나 하는 철 지난 토목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이 그린벨트 규제를 함부로 훼손하였고, 이제 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워 학교주변 유해시설 규제가 담긴 국민의 교

육권을 침해하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대통령의 ‘죄악’ 운운 발언이 있고 나서 모든 정부 부서에서 개혁할 규제들을 찾느라 분주한 모양인데 그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닐 법하다. 대통령의 지침을 따른다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면 무엇이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업들이 그동안 공익적인 이유로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제한들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 흐름 앞에서는 국방도, 교육도 뒷전이다.

전 정부가 국방상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규제했던 롯데그룹의 초고층건물 건축을 밀어붙이기로 허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집권 1년을 갓 넘긴 이 정부는 교육환경에는 뒷전인 채 한진그룹의 숙원사업을 뒷받침하며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블레이크의 말 그대로 “정신이 만들어 놓은 족쇄”를 깨고 나오는 일, 그것이 이 시대 민주시민들의 과제일 것이다.

NGO 칼럼

우리에게 귀농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김미경
광주 전남귀농학교 지도위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농을 해서 땅을 지키는 일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자식들이 먹을거리 문제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는다. 문화 생활은 부족해도 살 수 있지만 먹을거리의 문제는 없으면 당장 생존과 직결된다. 이 시대에 농사지를 땅을 지키고 농사지를 농부를 만들어 가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지역마다 귀농학교 설립 주체가 다르다. 광주는 1998년에 가톨릭 농민회 주최로 귀농학교가 시작돼 현재 24기까지 졸업했다. 그동안 24기가 졸업하고 오는 16일에 25기 입학식이 열린다. 귀농학교에서는 2개월간 귀농에 필요한 인문학 강의와 농사현장에서 의 1일 체험, 화순에서의 1박2일 체험이 계획 되어 있다.

광주귀농학교는 그동안 10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귀농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체험을 통해서 농사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농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귀농을 해서 어느 작물을 심을 것인가를 의논하고, 마을에 들어갔을때 동네어르신들과 소통의 어

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배우고 있기도 하다.

현재 광주귀농학교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회비가 늘어나야 한다. 다행스러운 일은 귀농학교 회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졸업 후 기수모임을 통해 한달에 한번 모임을 하면서 진한 통기에를 느끼고,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는 농가에 가서 함께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따뜻한 함이 있다. 귀농학교는 2012년부터 귀농하기 전 단계에서 배울 수 있도록 대촌에서 텃밭 4000평을 1구좌당 다섯평씩 분양해 도시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에는 텃밭 개장식을 했다. 텃밭에서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상추와 감자를 심는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땅을 파서 이랑을 만들고 1년 농사 계획을 세운다. 감자를 비롯해 청상추, 열무, 아욱 등을 심었다. 씨를 심고 며칠 후 밭에 가면 파란 싹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도 한다. 또한 물을 주고 직접 키워서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텃밭에서 계절에 맞는 다양한 농사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하다. 이와 함께 귀농학

교 안에서 토종씨앗 지키는 모임을 이어가며 우리 고유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는 움직임도 계속 되고 있다. 주변에 외래종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우리씨앗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키려는 모임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

귀농학교에서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우리 농촌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젊은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청년농부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귀농학교는 한달에 한번 모임과 여름 휴가철에 일주일간 농가에 머물면서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와 발표를 하면서 미래 농부를 꿈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벼농사와 농촌체험을 꾸준히 해주면서 농촌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귀농 귀촌 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광주귀농학교 회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광주전남귀농학교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먹을거리 문제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식량 자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社說

수도권 규제 풀어 지방에 대못 박을 건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도 규제 개혁을 명분으로, 수도권 특정지역 내 공장 증축을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의 투자유치 실적 저조로 가뜩이나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대비 건축물 면적)을 20%에서 40%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공장투자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자 개발을 제한해왔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만 큰 혜택을 입을 게 자명하다. 실제, 지난 2009년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로 풀어줬을 때도 경기도에서만 320개 공장이 증축을 했으며, 광주는 4개에 그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관련법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수차례 수정했다가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 정부가 다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 죽이기’나 다를 바 없다. 기업들이 대량 수요처이자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하지 지방으로 내려가려 하겠는가.

경제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광주·전남의 경우 기존 공장이나 내러울 계획으로 있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틈타 수도권으로 ‘U턴’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당장 잡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과 지방의 피해에 눈을 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방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호남고속철 공사에 짝퉁 부품 사용했다니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목포~충북 오송 간 공사에 저가 중국산 전력선이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고속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품질이 의심스러운 중국산으로 시공할 것이다. 승객 안전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하는 것인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호남고속철 공사에 사용되는 보조전력선을 국산인 것 처럼 속여 값싼 중국산을 납품한 전선회사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 낙찰액 158억 원에 이르는 보조전력선 제품은 모두 국내산이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약 60%의 공사 구간에서 모두 저가 중국산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선은 고속철도에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주 전력선과 보조전력선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중요한 구실을 하는 전선이 불량해서 후시라도 고속철 고장을 불러온다

면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치명적 결함으로 사실상 리콜이 결정된 KTX ‘산천’ 열차가 호남행 노선에 집중 투입돼 큰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다. 지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호남고속철 광주 송정~오송 구간은 속도가 절반으로 푹 떨어져 ‘반쪽 고속철’이라는 오명 끝에 올해 말 비로소 고속철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제가 겨우 제대로 된 고속철을 탈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민들은 다시 한 번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중국산 전력선이 공급됐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업자와 당국자의 결탁 여부를 밝혀낸 일 인명을 담보로 검은 돈 거래가 있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울러 코레일은 저질 전력선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 시공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난 1월 보름 일정으로 네발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왔다. 배낭을 꾸리며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풍경은 만년설을 머리에 인 설봉(雪峰)과 영하 수십도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고원지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트레킹 관문인 루크라에서 남체 바자르를 거쳐 한발 한발 걸어가며 고도를 높이는 동안 그런 고정관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광주전남귀농학교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먹을거리 문제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식량 자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곳은 나무로 난방을 하고 취사를 해야 하기에 집집마다 나무 장작이 쌓여있다. 그나마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고지대는 야크 똥을 말려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아마도 주민 수가 적었던 옛적에는 지금보다 더 숲이 울창했으리라.

트레킹을 하며 큼직한 대바구니에 금세 깨졌다. 빙하가 녹아 흐르는 두드러진 강을 옆에 끼고 걷는 길은 오를수록 울창한 침엽수림이

로 쓰기 위해 모으는 가 싶었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똥과 똥기들이 신랄시하는 수백

년 된 나무도 눈에 띄었다. 해발 3860m에 자리한 광보체 마을에도 굽직한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자리하고 있었다. 해발 4000여m를 넘어서야 비로소 나지막한 관목으로 바뀌었고, 5000m대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던 척박한 환경이었다.

트레킹 도중 가지치기가 잘된 나무들이 눈에 띄었다. 마을 주변이나 트레킹 코스의 나무들의 가지가 빠짐없이 잘려 있었다. 먼지 떨어치려 나무 몸통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벌목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가지만 잘라

/송기봉 사회2부장 song@kwangju.co.kr

기고

순천만 정원,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길!



김선희
정원해설사·KT근무

회 성공개최와 세계 최초로 하늘이 내린 정원 순천만과 인간이 만든 정원을 박람회로 연결시켜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순천만정원이 개장되면 순천만, 순천만정원, 동천, 봉화산둘레길이 도심으로 연결되어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된다. 이제 순천은 도시가 아니라 정원이다. 마치 경주시 도시 전체가 뚜껑 없는 박물관이 되어 문화 관광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 이제 순천은 하나의 큰 정원의 도시가 되어 생태관광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번에 개장한 순천만 정원에는 호수언덕길, 갯지렁이 다니는 길, 이색 자전거 숲길, 유채 꽃가마길 등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길 10곳을 선정하였으며, PRT(스카이큐브)를 타고 1급수 동천을 따라 순천만에 이르는 5km 구간을 가다 보면 김승옥·정채봉

문학관을 만나고 봄바람에 넘실거리는 연녹색 갈대밭의 정취에 흠뻑 빠지게 될 것이다.

현재 순천만정원 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며 매표시스템, 관람로, 시설 운영 등이 결정되고,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모집, 대규모 꽃단지, 나무 보식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지난해 정원박람회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을 착착 갖춰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 는 계절별 테마로 봄 ‘꽃’, 여름 ‘물’, 가을 ‘역새’, 겨울 ‘얼음과 눈’을 주제로 갖지렁이 놀이터, 동천 수상자전거, 사육사와 함께하는 동물퀴즈, 아침정원 산책, ‘사라진 동물들 찾아라’ 특별기획전시 등 다채로운 가족단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한다.

본래 없었던 땅에 한 사람이 먼저 가고 차츰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이 길이 된다. 희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순천만

정원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헤르만헤세는 그의 저서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 그것은 자연의 위대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 속에 자신을 던져 그 거대한 풍랑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나의 세계’로 바꾸어 나가는 일상 속의 철학이자 자연 속의 예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순천만정원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순천만정원을 찾는 분들에게 기억에 남을 명품 해설을 들려주기 위해 국내외 정원자료를 공부하고 우포늪, 창덕궁, 소쇄원, 덕천서원 등을 탐방하여 배경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순천만정원은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길이다. 이 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순천만정원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충전해 보는 건 어떨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 깨끗한 선거는 우리의 몫으로 다시 돌아왔다. 깨끗한 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선거 의식과 유권자의 확고한 주인의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번이 실수하는 제6회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을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만큼 국민들의 현명하고 깨끗한 표정을 행사하길 바라며, 이번 선거만큼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김도연·영암군 영암읍

불법선거 발 못붙이게 유권자들이 적극 감시하자

6·4 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후보예정자들은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알리기 위해 각 마을행사나 잔치자리에 얼굴을 내밀기 바쁘다. 하지만 벌써부터 불법선거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우리는 금권·탈법선거를 경험한 바 있다. 음성적인 금품수수,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空約), 비방·흑색선전으로 판정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무엇보다 ‘돈 선거’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팔아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 그동안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돈 선거가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한편으로 선거범죄가 보다 은밀해지고 지능화되어 신고·제보가

없던 한 적발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 다.

참된 일꾼 선택의 몫은 결국 유권자에게 있다. 유권자들이 불법이나 부정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 깨끗한 선거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불법선거사범을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그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는 제재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부 2200-661 <F A X 227-9600> <F A X 227-9600>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디자인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